

인상은 앞으로의 일인데 지원 요건은 왜 과거의 상태인가

기준금리 인상의 반영일은 계약마다 다르고 지원은 연체·승인·상환 이력으로 대상을 확정한다

한국은행의 8월 27일 통화정책 결정과 정부의 8월 28일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대조해, 금리가 반영되는 시점과 지원대상을 가르는 기준을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8.30	연번	2026_72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30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지원의 요건이 금리 인상 뒤 생길 부담보다 발표 때 이미 확인 가능한 상태에 맞춰졌다고 본다. 변동금리 반영일과 부담 증가는 계약마다 달라 한 번에 확정하기 어렵지만 연체일·승인일·상환 이력은 기록으로 남아 심사할 수 있다. 그 결과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자가 오르는 차주는 '금리 상승기 대비'라는 이름 안에서도 지원 밖에 남을 수 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고 정부는 다음 날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지원항목은 금리 인상 뒤 늘어난 이자액 자체가 아니라 과거 연체와 대출 승인일, 성실상환 이력 등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2.75%→3.00%	2026년 8월 27일
채무조정	2023년 6월 이전 연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대환	2025년 12월 말 이전 승인	연 7% 이상→연 4.5%
성실상환	0.3%p 우대	정책자금 한도 2억원 상향
청년 미소금융	500만원→1,000만원	신용평점·소득요건
세부 채무조정	4분기 확정	2027년 시행 계획

한국은행은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고 가계대출·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점을 인상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7월 16일 2.50%에서 2.75%로 올린 뒤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정부 자료는 채무조정, 저리자금, 이차보전과 고금리 대환 등을 취약차주·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으로 묶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요건은 보도자료 붙임과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 발생과 현재까지의 지속 여부를 봅니다. 대환은 2025년 12월 말 이전 승인된 연 7% 이상 대출, 성실상환 우대는 과거 상환 이력을 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기준금리가 오른 날 모든 대출 이자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계약에 정한 주기와 다음 금리변동일에 지표금리를 다시 적용합니다. 고정금리 계약은 약정기간 동안 직접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재정·기금의 대상을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연체 발생일, 대출 승인일, 성실상환 기록과 신용평점은 이미 기록돼 있어 빠르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인상으로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대출별 변동주기, 지표금리와 가산금리에 따라 달라 발표일에 한 숫자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이름은 미래 부담을 가리키지만 요건은 과거 상태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에 실행된 대출이나 지금까지 연체 없이 갚았지만 다음 변동일에 부담이 커지는 차주는 확인된 대환·채무조정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1억원의 변동금리 대출에서 지표금리가 인상폭만큼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0.25%포인트 상승은 연 25만원, 두 차례 합계 0.50%포인트는 연 50만원의 이자 차이입니다. 실제 반영폭과 시점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7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내렸지만,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는 연 4.37%로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8월 인상 전 통계로 신규와 기존 대출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지원 여부는 부담 증가액보다 대출 승인일·연체 시작일·상환 이력으로 갈립니다. 신청 전 자신의 계약 날짜와 공식 세부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	1억원	변동금리 가정
한 차례 인상	0.25%p	연 25만원
두 차례 합계	0.50%p	연 50만원
주의	계약별 상이	지표·가산금리·변동일 확인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채무조정 세부 기준 감면 수준과 연체기간 기준은 4분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02 · 대환 기준일 2025년 12월 말 뒤 승인된 대출까지 추가로 넓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3 · 예산 확정 햇살론·이차보전 확대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04 · 부담 증가 차주

연체율과 별도로 이번 인상 때문에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차주의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은행 앱이나 계약서에서 변동금리 여부, 지표금리, 다음 금리변동일과 변동주기를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을 검토한다면 대출 승인일이 2025년 12월 말 이전인지와 현재 금리가 연 7%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원 신청 전 4분기 세부안에서 연체 시작일·채권 종류·신용평점·소득요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금융회사

- 대출 상세 화면에 다음 변동일, 적용 지표금리와 예상 이자 변화를 함께 표시합니다.
- 지원 안내에는 승인일·연체일·상환이력 등 탈락을 가르는 기준일을 첫 화면에 적습니다.

당국

- 4분기 세부안에서 모든 사업의 기준일·신분·소득·연체요건을 한 표로 공개합니다.
- 연체 전이지만 이자부담이 늘어난 차주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별도 지표로 공표합니다.

칼럼길**지원 기준이 인상 뒤 대출까지 넓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채무조정 연체기간과 대한 승인일 기준의 최종 문안

A

기존 기준일을 유지한다
대상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지만 2026년 실행 대출과 연체 전 차주는 지원 밖에 남습니다.

B

기준일을 늦추거나 부담 증가를 반영한다
대상은 늘지만 계약별 이자 변화를 계산할 자료와 추가 재원·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4분기 채무조정 세부안과 2027년 예산의 대한·이차보전·햇살론 사업 기준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3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조정하나 ↗

[금융제도](#) 금리인하요구권 ↗

[피해구제](#)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01	1차 · 기준금리 2.75%에서 3.00%로 인상과 판단 배경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2026년 8월 27일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2	1차 · 기준금리 변경일과 3.00%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3	1차 · 취약차주 채무조정·저리자금·이차보전·고금리 대환 패키지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28일 자료(KDI 전재)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4	1차 · 2026년 7월 신규취급액 4.27%·잔액 기준 총대출 4.37% 한국은행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KDI 전재)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5	2차 · 대환 승인일 확대, 이차보전·미소금융·햇살론 규모 아주경제 2026년 8월 28일 보도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6	2차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과 성실상환 우대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28일 보도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7	파생 · 1억원에서 0.25%p는 연 25만원, 0.50%p는 연 50만원 1억원×0.0025 및 1억원×0.005. 실제 반영폭은 계약별로 다름 · 확인 2026-08-30

추적 예정	채무조정의 연체기간·감면 수준, 대환 승인일 기준과 내년 예산 확정 뒤 실제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한국은행·재정경제부·개별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대출·대환·채무조정의 개별 적격성 판단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